

2012년 아직도 이주노동자들은 외칩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1995년 이주노동자들이 명동성당에서 온 몸에 쇠사슬을 감고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욕 하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하는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했습니다. 17년이 지난 한국 이주노동자들은 다시 노예의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올 8월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노예로 부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만성적인 임금 체불, 높은 산재율, 폭행, 폭언과 모욕을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이런 부당한 처우를 참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직장을 옮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제도에서는 한국에서 일하는 수년 동안 단지 3번만 매우 엄격한 이유를 적용해, 그조차 사업주의 허락을 받아야만 직장을 옮길 수 있을 뿐입니다. 이 때도 노동부가 알선한 사업장 연락처를 받아 새 직장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8월 1일부터 이조차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의 명단을 사업주들에게 주고, 사업주가 원하는 노동자를 골라 직접 전화를 합니다. 한국말에 서툰 이주노동자들은 전화로 그 일 자리를 고를 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발만 동동 굴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들은 3개월 동안 새로운 일을 구하지 못하면 비자가 취소돼 출국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인들에게 이런 제약을 가한다면, 어떨까요? 이주노동자는 한국에서 필요한 일을 할 사람이 부족해 국경을 넘어 일을 하러 온 노동자입니다. 한국이 필요로 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소한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자유롭게 직장을 옮길 권리와 한국인 노동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것을 위해 즉각 노동부 지침을 폐기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사업주들의 권리만 1백 퍼센트 보장하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처지와 조건이 악화될수록, 전체 노동자들의 조건과 처우는 하향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한국인이든, 이주노동자든, 모든 노동자는 같은 노동자, 같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고용허가제 노동자 2011년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2011년)

- 61.6%가 사업장 이동 원함(5인 이하 사업장의 82.1%가 사업장 이동을 원하는 것으로 나와 영세한 사업장 노동 조건이 극히 열악함을 보여줌) 사유 : 일이 너무 힘들, 정당한 수당 미지급, 열악한 노동조건, 비인간적 대우, 임금 체불
- 평균 노동시간 12시간(2009년 11시간에 비해 더 늘어났음)
- 작업장 내 가혹 행위 : 욕설(78%), 문화차별(43.9%), 폭행(26.8%), 성희롱(13.5%)
- 근로 계약 위반 58.3%
- 고용허가제 노동자 중 약 32%가 사업장 변경 횟수 초과와 구직기간(3개월) 초과로 미등록이 되었음
- 산업안전교육 57.5% 부재(네팔 노동자들은 9%만이 모국어로 된 안전수칙 공지 받음)
- 산재 발생 시 47.5%가 치료비 본인 부담함

2012년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보내는 권고 중에서

“위원회는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차별, 착취, 낮은 임금, 임금체불의 상황에 처해 있음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주노동자가 ...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영주자격을 획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가 (특히 미등록 상태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권리를 누릴 수 없으며, 이들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국가에서 추방되었다는 정보에 대해 대단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특히 체류자격 유형의 복잡성과 다양성, 출신국에 따른 차별,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바꿀 기회 제한, 최대 고용기간에 관하여 다시 개정할 것;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특히 아동이) 적절한 생활조건, 주거, 건강보장,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위원회는 당사국에 모든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비준할 것을 권고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정녕 외면하는가?**

**회사도 마음대로 고르지 못하는
이주노동자사업장변경 내부지침!
반인종적 반인권적 정책 철회하라!**

|| 이주공동행동

안타까운 몽골 이주노동자의 죽음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지난 8월 27일 새벽 2시, 몽골 이주노동자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비자 없이 미등록 노동자로 일하다가 출입국 단속반에 걸려 붙잡혀 와 며칠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사망 몇 시간 전부터 고통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끝내 사망했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 보호소에서 단지 약물만 처방한 채 방치됐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자신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항망한 죽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8년에도 버마노동자가 단속된 지 하루 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출입국은 이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위험한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일망타진식 단속을 하지만, 이들은 그저 묵묵히 일해 온 노동자들입니

다. 그저 체류 비자 없이 일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체포돼 외국인보호소에 보내지고, 추방당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노동 감독이 노동 조건을 감독하기 보다는 미등록 이주자를 색출하기 위한 것이며, 단속이 강화되어 강제추방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난민 심사 과정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한 사람들의 집을 단속반이 급습해 단속하는 야만적 작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등록 이주민들에 대한 합법화 없이 단속에만 의존하는 이런 야만적 정책은 계속해서 이주민들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 것입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중단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해 주세요!

- 엠네스티 한국지부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편지쓰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아래의 주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선택의 권리를 박탈하는 지침을 철회하라!
<http://amnesty.or.kr/ai-action/5783/?submitted=5720>

-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노동부 지침 철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위한 기금 모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후원계좌 : 신한 110-286-979210 정영섭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인권연대,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